

정책분석과 동향

1, 2차 베이비붐세대의 소득 및 자산 특성 비교

|이주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 2차 베이비붐세대의 소득 및 자산 특성 비교

A Comparison of Income and Assets in the Early and Late Baby-Boomer Cohorts

이주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부연구위원

1차 베이비붐세대는 2024년 기준 61~69세(1955~1963년생)로 이미 은퇴 연령에 진입하였다.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붐세대는 2024년 기준 50~60세(1964~1974년생)로 향후 10년 동안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도달할 예정이다.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소득과 자산 상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1, 2차 베이비붐세대의 소득, 자산 등 경제적 여건, 경제활동 상태변화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주목하여 이들을 구분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1, 2차 베이비붐세대는 경제활동 시기의 시대적, 경제적 배경 특성으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축적과 활용에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각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1 들어가며

베이비붐(baby boom)은 어떤 시기에 출생하는 아이의 수가 폭증하는 현상으로, 이 시기에 태어난 출생 코호트를 베이비부머(baby boomer)라 부른다(통계청, 201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출생아 수가 급증하는 베이비붐을 경험했는데, 미국에서는 합계출산율

(2.94~3.76)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1946~1964년생을, 일본에서는 출생아 기준으로 1947~1949년생(806만 명)을 제1차 베이비붐세대(단카이세대), 1971~1974년생을 제2차 베이비붐세대(एको세대)로 분류한다(통계청, 2012). 이처럼 베이비부머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출산율과 출생자 수이다. 한국에서는 출산율을 기준으로 조출생률이 다른 시기보다 현저히 높았던 1955~1963년에 태어

난 세대를 1차 베이비붐세대로, 출산율이 감소했음에도 가임 여성(특히 1938~1950년생)의 증가로 출생자 수가 크게 증가한 1964~1974년에 태어난 세대를 2차 베이비붐세대로 구분한다(통계청, 2012). 2023년 총인구 기준 1차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는 약 705만 명, 2차 베이비붐세대(1964~1974년생)는 약 950만 명 규모이다(통계청 KOSIS, 2023). 1차 베이비붐세대는 한국 전쟁 이후 경제 재건과 산업화의 중심 세대로 성장하였는데, 이들은 1970~8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과 민주화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김용하, 임성은, 2011). 더욱이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대량 소비 문화를 형성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경제적 어려움도 경험한 세대이다. 2차 베이비붐세대는 1차 베이비붐세대보다 더 큰 규모로,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높은 교육 수준과 기술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이끌었다(김용하, 임성은, 2011). 이 글은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베이비붐세대 내 소득, 자산, 부채, 경제활동,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1차 베이비붐세대는 2024년 기준 61~69세로 이미 은퇴 연령에 진입하였고,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붐세대는 2024년 기준 50~60세로 향후 10년 동안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도달한다. 은퇴 이후에는 소득 활동이 줄어들면서 연금

혹은 기존 자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2차 베이비붐세대는 1차 베이비붐세대보다 소득, 자산 여건, 국민연금 납부 규모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이재호 외, 2024, p. 4). 그럼에도 현재 노인 세대 혹은 노인으로 곧 진입 예정인 세대의 경우 연금 미성숙으로 인해 국민연금 만으로는 생활비 충당이 어려운 세대이다. 또한 한국의 특성상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점에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은 노후 대비를 위한 활용으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을 확대해 왔다.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및 기준 상향 등을 통한 기초보장제도의 확대, 기초연금 급여 수준 인상 및 대상자 확대, 노인 일자리 규모 확충 등이 노후소득 보장 정책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 개선 속도는 더딘 상태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베이비붐세대의 노인층 진입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같은 연령 기준으로 묶인 노인층이지만 이들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개인별 맞춤형 지원은 정책적·행정적으로 비효율성이 높을 수 있는 점에서 공통된 특성을 가진 집단별로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노인빈곤 문제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즉 노인 세대로 진입했거나 진입 예정인 베이비붐세대의 소득과 자산 특성 파악을 통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할과 방향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1, 2차 베이비붐세대의 소득, 자산 여건, 경제활동 상태, 가족 구조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주목하여 이들을 구분해 살펴보았다. 실태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이다. 소득과 자산 등이 가구 단위로 조사되고 영위된다는 점에서 가구 연령을 기준으로 베이비붐세대를 구분하고 분석하였다.

2 1, 2차 베이비붐세대의 일반 특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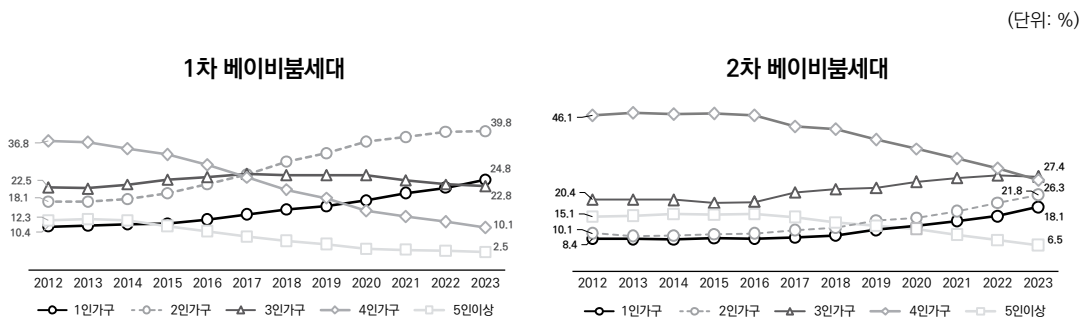
먼저 1, 2차 베이비붐세대의 일반 특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두 세대를 비교해 보면 1차 베이비붐세대는 은퇴와 함께 가구 규모가 줄어드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2차 베이비붐세대는 가구 구조 변화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베이비붐세대의 가구 특성을 분석한 김진후 외(2019)의 연구에서도 은퇴 이후

1~2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자녀의 독립과 배우자의 사망 등 베이비부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였다(김진후 외, 2019).

2차 베이비붐세대 역시 1~2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증가세가 1차 베이비붐세대보다는 완만하게 나타난다. 다인 가구(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소규모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해당 세대가 아직 중장년층으로 자녀 독립이 진행 중인 연령 효과와 2000년대 이후 1~2인 가구는 증가하는 반면 3~4인 가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성(박중서 외, 2020, pp. 46-47)의 기간 효과가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 2차 베이비붐세대의 교육 수준을 비교해 보면 먼저 1차 베이비붐세대는 고졸 이하 학력 비중이 높고, 대졸 이상 학력이 낮게 나타난다. 이들은 한국전쟁 직후 태어나 한국사회의 압축적 성장 과정

[그림 1] 1, 2차 베이비붐세대의 가구 규모별 비율 변화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각 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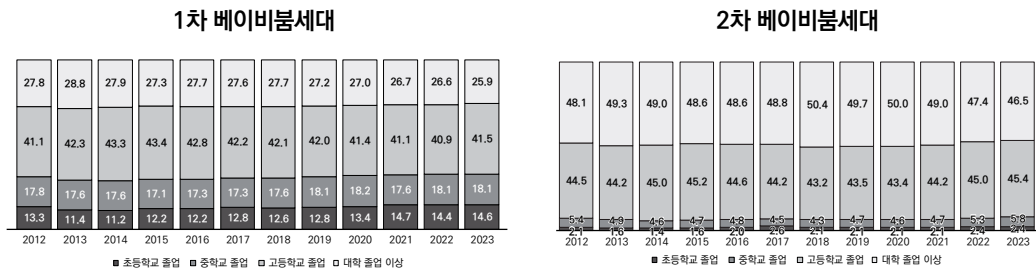
을 겪은 세대로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 기회가 제한된 시기적 영향이 존재한다(김용하, 임성은, 2011). 2차 베이비부ם세대는 대졸 이상 학력 비율이 현저히 높은 모습이다. 이는 교육 기회가 증가하고 고등교육이 대중화된 시기의 결과로 볼 수 있다. 1차 베이비부ם세대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확대되었지만, 중등 및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사회 구조적 제한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적었던 반면 2차 베이비부ם세대는 중등교육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교육의

접근성이 향상된 시기에 성장기를 보낸 점에서 1차 베이비부ם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최장훈 외(2017)의 연구에서도 1차 베이비부ם세대보다 2차 베이비부ם세대의 교육 수준이 높음을 확인하였고, 교육수준은 근로소득, 배우자유무 등과 함께 노후의 소득과 자산을 전망하는 주요 요인임을 분석을 통해 밝혔다.

다음으로 두 세대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 양상을

[그림 2] 1, 2차 베이비부ם세대의 교육 수준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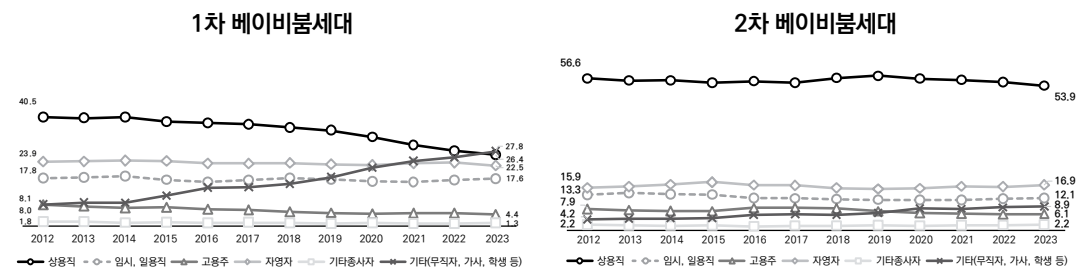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각 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 1, 2차 베이비부ם세대의 종사상 지위 비율 변화

(단위: %)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각 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살펴보자. 1차 베이비붐세대는 은퇴 시점에 가까워짐에 따라 상용직 비율이 감소하고, 자영업 또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2차 베이비붐세대는 상용직 종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일부 자영업으로 이동하거나 비경제활동 상태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1, 2차 베이비붐세대의 연금 가입 실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일 것인가. 1, 2차 베이비붐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특성을 비교해 보고자 명확한 연령 구분은 아니지만, 2015년과 2023년 기준의 50대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기준 50대(1956~1965년생, 1차)의 국민연금 가입률(국민연금 가입자 수/(해당 연령 인구수-공무원연금 가입자 수)¹⁾*100)은 74.0%로 2023년 기준 50대(1964~1973년생, 2차)의 국민연금 가입률 81.4%보다 낮게 나타난다. 연금 가입 기간 또한 연금 수급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국민연금이 도입(1988년)될 당시에 이미 30대 중반에서 40대에 있던 1차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가입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시기적인 영향, 즉 기간 효과가 존재한다. 단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1차 베이비붐세대

[표 1] 가입자의 종류별·연령별 국민연금 가입자 수

(단위: 명)

〈2015. 12. 기준〉

| 구분 | 계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
|--------|------------|------------|-----------|---------|---------|
| 계 | 21,568,354 | 12,805,852 | 8,302,809 | 240,582 | 219,111 |
| 30세 미만 | 3,669,021 | 2,366,778 | 1,297,185 | 5,058 | - |
| 30~39세 | 5,573,869 | 3,777,924 | 1,772,400 | 23,545 | - |
| 40~49세 | 6,225,329 | 3,864,053 | 2,284,769 | 76,507 | - |
| 50~59세 | 5,881,017 | 2,797,097 | 2,948,448 | 135,472 | - |
| 60세 이상 | 219,118 | - | 7 | - | 219,111 |

〈2023. 12. 기준〉

| 구분 | 계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
|--------|------------|------------|-----------|---------|---------|
| 계 | 22,384,787 | 14,812,062 | 6,714,114 | 324,601 | 534,010 |
| 30세 미만 | 3,867,648 | 2,432,936 | 1,411,990 | 22,722 | 0 |
| 30~39세 | 5,202,763 | 3,813,310 | 1,365,586 | 23,867 | 0 |
| 40~49세 | 6,020,334 | 4,284,622 | 1,640,213 | 95,499 | 0 |
| 50~59세 | 6,760,031 | 4,281,194 | 2,296,324 | 182,513 | 0 |
| 60세 이상 | 534,011 | 0 | 1 | 0 | 534,010 |

출처: "2015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국민연금공단, 2016, p. 2; "2015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국민연금공단, 2024, p. 3.

1) 2015년 기준 50~59세 인구는 822만 296명, 2023년 기준 863만 5535명(통계청 KOSIS)이며,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는 2015년 27만 5497명, 2023년 33만 342명(공무원연금공단, 2023)이다.

의 경우 2차 베이비붐세대보다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1차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가입률도 낮을뿐더러 가입 기간이 제한적인 점에서 수급액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2차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잡은 이후 경제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연금 가입 지속 비율이 높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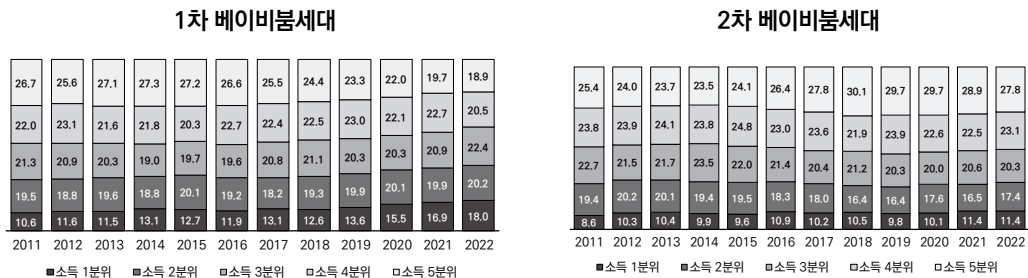
3 1, 2차 베이비붐세대의 소득 및 지출 변화

[그림 4]를 보면 1차 베이비붐세대는 상위 소득 분위 비율이 감소하고, 하위 분위로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은퇴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와 연금 등 이전소득 의존 증가로 해석된다. 2차 베이비붐세대는 소득 중위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상위 분위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보

인다. 이는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연령층으로 소득활동 중인 연령 효과로 볼 수 있다. 즉 1차 세대는 은퇴로 인한 소득 감소가 두드러지며, 2차 세대는 현역 근로자로서 소득 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두 세대 경제활동 시기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1차 베이비붐세대가 경제활동을 하던 시기는 고도성장기로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노동시장에 안착하여 산업화 과정에서 확립된 직장의 고용제도 및 사회적 인프라의 수혜를 누릴 수 있었다(방하남 외, 2010; 황수경, 2012). 반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극대화되었던 1997~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기 본격적으로 취업시장에 진출한 2차 베이비붐세대는 30~40대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또한 경험하면서 소득격차 확대는 물론 자산축적의 기회가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백웅기, 2013). 이처럼 각 세대의 코호트 효과도 무시할 수

[그림 4] 1, 2차 베이비붐세대의 소득분위별 비율 변화

(단위: %)



주: (균등화) 경상소득 기준 소득 분위, 가구 가중치 적용.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각 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없다. 이러한 경제활동 시기 사회경제적 배경은 앞서 살펴본 연금 가입률, 가입 기간과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세대 간 소득불평등과 함께 세대 내 소득불평등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들의 소득수준을 비교해 보면 1차 베이비붐세대는 경상소득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근로소득 비중이 감소하며 공적 이전소득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차 베이비붐세대는 경상소득 증가가 더욱 빠르게 나타나며, 근로소득이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즉 연령 효과로 인해 1차 베이비붐세대는 소득원 다변화가 이루어졌고, 2차 베이비붐세대는 현재까지 근로소득 중심의 소득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은 1, 2차 베이비붐세대의 소비지출 비중 분포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1차 베이비붐세대와 2차 베이비붐세대는 전반적으로 소비지출 구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1차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의료비 비중이 2011년 12.7%에서 2022년 13.3%로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는데, 이는 고령화에 따른 건강 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로 해석할 수 있다. 주거비와 식료품비 비중도 꾸준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 부담이 줄어들어 은퇴 세대의 특징을 반영하여 교육비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오락·문화비 비중은 낮게 유지되며, 여가에 대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모습을 보인다. 2차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교육비 비중이 여

[표 2] 1, 2차 베이비붐세대의 소득 수준

(단위: 만 원/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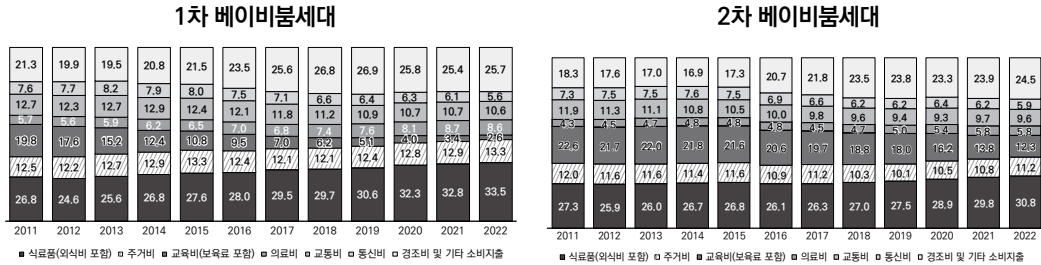
| 구분 | 1차 베이비붐세대 | | | | | | 2차 베이비붐세대 | | | | | |
|------------|-----------|-------|-------|-------|------------|------------|-----------|-------|------|-------|------------|------------|
| |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 2011 | 2,914 | 1,760 | 940 | 120 | 34 | 59 | 2,838 | 1,891 | 818 | 74 | 23 | 32 |
| 2012 | 3,059 | 1,890 | 931 | 145 | 29 | 64 | 2,886 | 1,994 | 767 | 73 | 22 | 31 |
| 2013 | 3,199 | 2,007 | 944 | 146 | 24 | 78 | 2,972 | 2,061 | 789 | 66 | 21 | 36 |
| 2014 | 3,258 | 2,055 | 933 | 150 | 21 | 98 | 3,071 | 2,145 | 793 | 71 | 20 | 41 |
| 2015 | 3,304 | 2,079 | 881 | 183 | 33 | 128 | 3,226 | 2,239 | 837 | 87 | 16 | 48 |
| 2016 | 3,767 | 2,284 | 970 | 286 | 42 | 185 | 3,725 | 2,548 | 938 | 154 | 19 | 67 |
| 2017 | 3,859 | 2,285 | 972 | 317 | 46 | 238 | 4,017 | 2,755 | 985 | 182 | 25 | 71 |
| 2018 | 3,860 | 2,321 | 889 | 312 | 57 | 281 | 4,211 | 2,990 | 927 | 187 | 29 | 77 |
| 2019 | 3,880 | 2,241 | 857 | 347 | 70 | 366 | 4,412 | 3,076 | 977 | 226 | 31 | 102 |
| 2020 | 3,949 | 2,105 | 830 | 358 | 74 | 583 | 4,545 | 3,112 | 932 | 231 | 30 | 240 |
| 2021 | 4,099 | 2,074 | 874 | 406 | 79 | 667 | 4,717 | 3,283 | 904 | 250 | 35 | 246 |
| 2022 | 4,237 | 2,104 | 873 | 425 | 83 | 751 | 4,976 | 3,466 | 992 | 253 | 44 | 221 |
| 연평균 증가율 | 3.46 | 1.63 | -0.67 | 12.18 | 8.33 | 25.97 | 5.24 | 5.66 | 1.77 | 11.77 | 5.95 | 19.39 |

주: (균등화) 경상소득 기준 소득 분위, 가구 가중치 적용.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각 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 1, 2차 베이비붐세대의 소비지출 비율 변화

(단위: %)



주: 가구 가중치 적용.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각 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전히 높게 나타난다. 2011년 4.3%에서 2022년 5.9%로 증가하는 등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의료비 비중은 1차 베이비붐세대보다 낮지만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거비와 식료품비 비중 등 필수 지출 비중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이다.

4 1, 2차 베이비붐세대의 자산 변화

마지막으로 1, 2차 베이비붐세대의 자산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차 베이비붐세대는 상위 자산 분위의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일부 하위 분위로 이동하는 비율도 관찰된다. 이는 부동산 가치 하락 또는 은퇴 이후 자산 사용과 연관될 수 있다. 2차 베이비붐세대는 상위 자산 분위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점에서 자산 축적이 가능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즉 1차 베이비붐세대는 자산 감소와 활용이 진행 중인 반면 2차 베이비붐세대는 자산 형성 단계에서 비교적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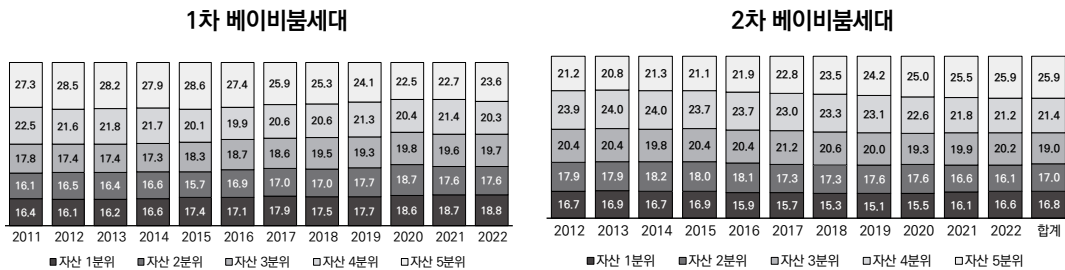
또한 1차 베이비붐세대는 총자산이 소폭 증가했으나, 거주 주택 외 부동산 비율이 높고 부채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2차 베이비붐세대는 총자산 절대액 증가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금융자산 비중이 1차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부채 또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1차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총자산의 2012~2023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은 3.68%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2차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총자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6.33%로 1차 베이비붐세대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난다. 거주 주택 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은 1차 베이비붐세대

5.92%, 2차 베이비붐세대 8.67%로 2차 베이비붐세대에서 상대적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다. 개인의 생애주기 내에서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 예컨대 경제활동이 활발한 30~40대의 경우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축적기로 본다면 50~60대의

경우 축적된 자산이 정점을 이루게 되는데, 은퇴 이후 자산을 활용하여 생활비, 의료비 등의 지출을 하는 등(Modigliani, 1954) 연령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 변화 양상을 통해 1차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자산 활용과 감소가 주요 이

[그림 6] 1, 2차 베이비붐세대의 자산 분위별 비율 변화

(단위: %)



주: 총자산 기준 자산 분위, 가구 가중치 적용.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각 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3] 1, 2차 베이비붐세대의 자산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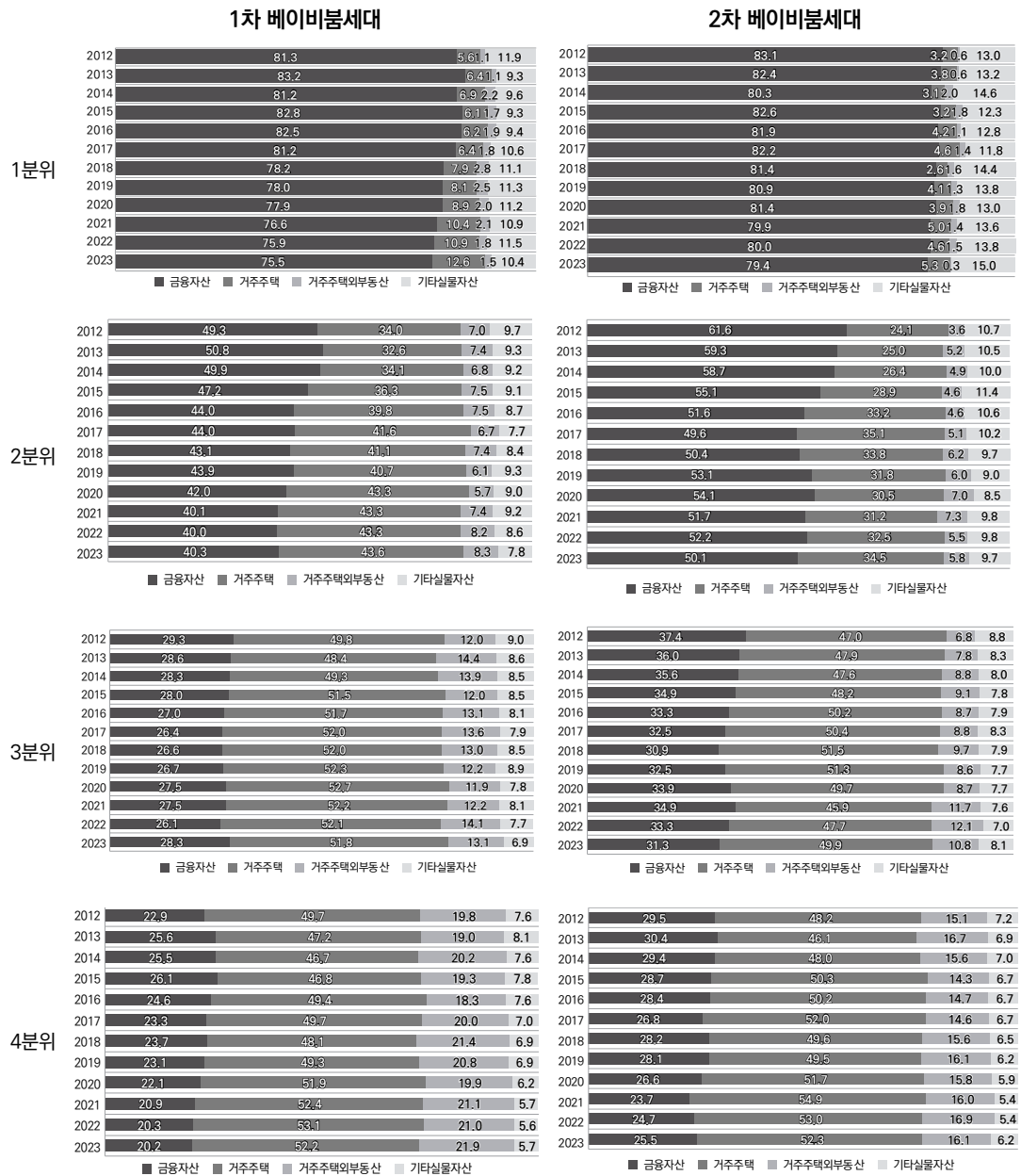
(단위: 만 원/년)

| 구분 | 1차 베이비붐세대 | | | | | | 2차 베이비붐세대 | | | | | |
|---------|-----------|--------|--------|-----------|---------|-------|-----------|--------|--------|-----------|---------|--------|
| | 총자산 | 금융자산 | 거주주택 | 가주주택외 부동산 | 기타 실물자산 | 부채 | 총자산 | 금융자산 | 거주주택 | 가주주택외 부동산 | 기타 실물자산 | 부채 |
| 2012 | 41,936 | 9,633 | 14,736 | 14,603 | 2,964 | 7,463 | 32,694 | 9,301 | 11,523 | 9,393 | 2,477 | 6,527 |
| 2013 | 42,410 | 10,446 | 14,298 | 14,518 | 3,148 | 7,911 | 32,354 | 9,758 | 11,407 | 8,656 | 2,533 | 6,810 |
| 2014 | 44,019 | 10,656 | 14,811 | 15,195 | 3,357 | 7,968 | 33,411 | 9,993 | 12,143 | 8,804 | 2,470 | 7,019 |
| 2015 | 44,589 | 10,894 | 15,519 | 15,122 | 3,054 | 8,062 | 34,674 | 10,178 | 13,052 | 9,037 | 2,407 | 7,087 |
| 2016 | 46,417 | 10,774 | 16,666 | 16,014 | 2,963 | 8,576 | 38,007 | 11,173 | 14,444 | 9,874 | 2,516 | 7,735 |
| 2017 | 47,960 | 11,389 | 17,354 | 16,359 | 2,857 | 8,522 | 41,103 | 11,474 | 16,385 | 10,654 | 2,590 | 8,482 |
| 2018 | 50,549 | 11,947 | 18,850 | 16,698 | 3,053 | 8,560 | 46,558 | 12,679 | 18,128 | 12,966 | 2,785 | 9,574 |
| 2019 | 51,053 | 11,941 | 20,280 | 15,786 | 3,046 | 8,218 | 49,040 | 13,469 | 19,371 | 13,578 | 2,623 | 10,198 |
| 2020 | 51,149 | 11,341 | 20,957 | 16,246 | 2,604 | 8,138 | 51,006 | 13,090 | 20,697 | 14,690 | 2,528 | 10,454 |
| 2021 | 55,734 | 11,858 | 24,280 | 16,858 | 2,737 | 8,050 | 57,927 | 13,927 | 25,687 | 15,600 | 2,714 | 10,788 |
| 2022 | 55,734 | 11,858 | 24,280 | 16,858 | 2,737 | 8,050 | 57,927 | 13,927 | 25,687 | 15,600 | 2,714 | 10,788 |
| 2023 | 62,387 | 12,599 | 27,749 | 19,255 | 2,783 | 8,036 | 64,236 | 14,914 | 28,772 | 17,704 | 2,846 | 11,215 |
| 연평균 증가율 | 3.68 | 2.47 | 5.92 | 2.55 | -0.57 | 0.68 | 6.33 | 4.39 | 8.67 | 5.93 | 1.27 | 5.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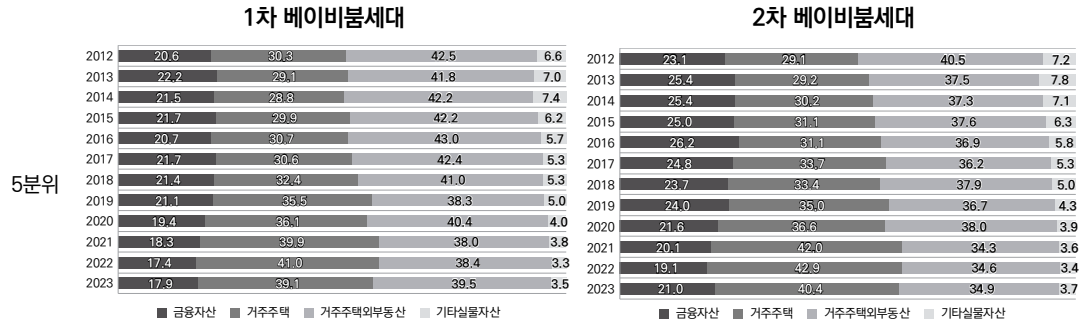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각 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7] 1, 2차 베이비붐세대의 자산 분위별 자산 분포 변화

(단위: %)



[그림 7] 계속



주: 총자산 기준 자산 분위, 가구 가중치 적용.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각 연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슈임을 확인할 수 있다. 2차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자산 축적이 진행 중이나 부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차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자산 형성과 동시에 부채 관리 또한 중요한 과제를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자산 분위별 자산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1차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자산 하위 분위일수록 금융자산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며, 상위 분위(4~5분위)로 갈수록 자산의 대부분이 거주 주택 및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2차 베이비붐세대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나 자산별 비중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자산 하위 분위는 금융자산 의존도가 높고 절대적 금액이 큰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낮은 점에서 자산 고분위, 저분위 간 자산 불평등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차 베이비붐세대는 1차 베이비붐세대와 비교 시 자산 내 금융자산의 비중이 전반적

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경제활동 시기의 차이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축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5 나가며

베이비붐세대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주도한 중요한 인구 집단이다. 이들은 1차와 2차 세대로 구분되며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조건에서 성장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1차 베이비붐세대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중심 세대로, 경제성장의 혜택을 비교적 많이 누렸으나, 이들의 경제활동 시기의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같은 제도 도입 혹은 초기 단계로 사회보장에서 배제된 세대라 볼 수 있겠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경험한 시기적 차이, 즉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들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공통된

특성을 가진 집단별로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노인빈곤 문제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1, 2차 베이비붐세대의 소득, 자산 여건, 경제활동 상태, 가족 구조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주목하여 이들을 구분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현재 은퇴 시점에 도달하거나 이미 은퇴 후 노후를 보내고 있는 점에서 소득 감소 혹은 소득 단절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1차 베이비붐세대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회보험의 미성숙으로 연금 수준이 낮거나 제도의 사각지대 대상이 될 가능성이 2차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더불어 한국의 특수성으로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로 인해 유동화자산의 축적이 부족한 점 또한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차 베이비붐세대는 높은 교육 수준과 기술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도 경제활동을 이어 가고 있는데, 자산 축적이 진행 중이나 부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처럼 두 세대는 경제활동과 소득, 자산 구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연령에 따른 변화와 함께 각 세대가 경험한 시기적 영향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들로 볼 수 있다. 1차 베이비붐세대는 은퇴와 함께 연금 의존도가 높아지며 근로소득 비중이 감소하고, 자산의 활용과 감소가 주요 이슈로 나타난다. 또한 이들의 경우 국민연금이 도입(1988년)될 당시에 이미 30~40대로 연금 가입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시기적인 영향으로 수급 연금액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2차 베이비붐세대는 아직 경제활동 연령층에 머물러 근로소득 중심의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부채 비중 증가와 자산 축적의 불균형으로 인해 향후 노후 준비와 부채 관리 등이 주요 이슈로 확인되었다. 가구 구조에서도 1차 베이비붐세대는 은퇴 후 1~2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2차 베이비붐세대는 자녀 독립이 진행 중인 과도기적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1, 2차 베이비붐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차 베이비붐세대는 기여에 의한 사회보험 급여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사회보험 급여 보완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구조적으로 국민연금 기여 이력이 짧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정책으로 기초연금 인상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소득 및 자산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노년층에 대한 일괄적인 기초연금액 인상이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효율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현재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대해 노년층 내 연령 구분(전기 노인/후기 노인 등) 혹은 소득수준 구분을 통한 차등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모기지 대출 활성화, 주택연금 확대 등을 통한 자산 유동화를 지원하는 정책과 더불어 근로할 수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 일자리의 다양화, 급여 현실화 방안 등 보완적 소득지원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차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연금 가입 및 지속을 유도하거나 자산 축적을 도우면서 부채 관리를 지

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 선제적인 노후 대비 지원을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경제 활동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집단의 연금 수급권의 지속 및 강화를 위해 지속 고용과 고용 기회를 확대 하는 동시에 재취업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생계를 위한 가계부채를 경험하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비와 의료비 등 필수 생활비에 대한 공공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부채로 인한 위기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채 특성을 고려하여 부채 상환을 유예하거나 이자 부담을 낮추는 가계부채 관리 및 부채 조정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붐세대는 한국 경제와 사회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세대인 만큼 이들의 노후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기존의 연금제도에서 배제된 중고령층 소득보장 측면의 보완 정책 등 각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은 베이비붐세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고령화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공무원연금공단. (2023). **2023년 공무원연금통계집**.
https://www.geps.or.kr/pensionInfo_stati

stics_2023_incumbent

국민연금공단. (2016). **2015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https://www.nps.or.kr/jsppage/app/cms/view.jsp?seq=18284&cPage=11&cmsId=statistics_month&SK=&SW=&SK2=

국민연금공단. (2024).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https://www.nps.or.kr/jsppage/app/cms/view.jsp?seq=29365&cPage=1&cmsId=statistics_month&SK=&SW=&SK2=

김용하, 임성은. (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31(2), 36-59.

김진후, 조강현, 이재수. (2019). 베이비부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특성 변화 연구-가구특성에 따른 서울시와 수도권 베이비부머의 2006-2018년 변화. **서울도시연구**, 20(4), 23-44.

박중서, 최선영, 김유경, 변수정, 조성호, 김주현, 노현주, 염아림. (2020). **한국 가족의 변동 특성과 정책적 함의-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방하남, 신동균, 이성균, 한준, 김지경, 신인철. (2010).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Work Life)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백웅기. (2013). **가계부문의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이재호, 강영관, 조윤해. (2024).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한국은행.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depth=200433&menuNo=200433&nttlId=10085515&programType=newsData&relate=Y>

최장훈, 이태열, 김미화. (2017).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1, 2차 베이비부머 간 은퇴 시 자산 적정**

성 비교분석. 보험연구원.

통계청. (2012. 8. 2.).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분석-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중심으로** [보도자료].

통계청 KOSIS. (2023). **인구총조사-연령 및 성별 인구·읍면동**.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1N1503&conn_path=I3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황수경. (2012). **베이비붐 세대 이행기의 노동시장 변화** (정책연구시리즈 2012-15). 한국개발연구원.

Modigliani, F. (1954). *Utility Analysis and the Consumption Function: An Interpretation of Cross-Section Data*.

A Comparison of Income and Assets in the Early and Late Baby-Boomer Cohorts

Lee, Jumi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early-cohort baby boomers, born between 1955 and 1963, have already entered their retirement years. In the next ten years, the larger late cohort, consisting of individuals born between 1964 and 1974 and aged 50 to 60 as of 2024, will have passed the statutory retirement age of 60. Given the high poverty rate persisting among the elderly, policy measures targeting these baby boomers should be designed with a clear understanding of their income and asset characteristics. This article examined the early and late cohorts, focusing on how they differ from one another in terms of income and asset situations, economic participation. The two cohorts differed in the accumulation and use of income and assets, likely due to the differing socioeconomic conditions of their respective economic engagement periods. This article further discusses the need for policy response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baby-boomer cohort.